



군산시, 군산상공회의소, 협력업체 등 200여명은 5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과 관련된 토론회 시작되기 전 국회 정문에 모여 군산조선소 도크가동 유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기에 빠진 군산지역의 어려움을 간곡히 호소했다.

현대중공업, 수주물량

침체된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야

현대중공업이 수주하는 대형 상선, 유조선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세계 경기 침체에 선박 건조 물량 수주절벽으로 위기에 처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송하진 지사 및 군산시장, 김관영·장병완·조경태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문석 이화여대 교수, 산업부, 금융위, 고용노동부,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했다.

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 유지를 적극 요청하면서 "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한 대내외 관심과 전북도민의 열망, 정부의 의지를 담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관영 국회의원은 "군산조선소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국회의원들과 합심해

군산서 군산조선소 정상화 논의

선박펀드자금 일정분

군산지역에 할당 주장도

"대우조선해양 안이한 대처

군산 조선산업 위기 초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최연성 군산대학교 교수의 '군산 조선산업 위기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를 발제로 시작돼 5명의 지정토론자를 정해 개별토론을 이어 나갔다.

JY중공업 이흥열 대표는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으로 인해 정치권과 정책기관의 관심과 배려·대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선박펀드자금 일정분은 전북(군산)지역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전문학적 공격자금을

투입하고 일감을 만들어 주는 등 비정상적인 정책배려를 하면서, 군산지역에는 실질적인 정책적 배려가 없다"면서 "정부가 준비하는 선박펀드의 상당부분을 군산지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데 쓰이도록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산대학교 최연성 교수는 "정부의 조선업 경제활성화 방안에 선박펀드를 활용해 75% 이상의 선박 발주 예정이나, 군산은 도크 폐쇄로 인해 더 이상의 건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안이하게 대처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군산 조선산업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며 강력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정부에서 조기 발주하는 물량이 동남권 조선단지에 집중되는 만큼, 현대중공업에서 수주하는 대형 상선, 유조선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하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며 "선박펀드의 우선지원으로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아주며, 경제 위기에 걸릴 수 있는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토론회로 나선 이동훈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은 "군산조선업 위기극복 금융정책 방안"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 과장을 발표하였고, 백연옥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지역협력과장의 '군산 조선업 고용동향 현황분석 및 대안'에 대한 발표를 끝으로 참가자들의 질의 응답 후 마무리됐다.

한편, 군산시, 군산상공회의소, 협력업체 등 200여명은 토론회 시작 전 국회 정문에 모여 군산조선소 도크가동 유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기에 빠진 군산지역의 어려움을 간곡히 호소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군산조선소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정부 부처 및 정치권·학계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군산조선소의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토론회가 개진됐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공조해 당면 위기를 잘 헤쳐나 갈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군산=문정곤 기자

도, 지방투자촉진 '최우수'

2년 연속 정부로부터 표창장 내년에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국고보조금 5% 더 지원받아

전북도가 2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방투자촉진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로써 전북이 전국에서 투자하기 제일 좋은 지역임을 입증했고, 내년에는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국고보조금을 5% 더 지원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과 유치기업에 대한 행정적 만족도를 제고하고 자 연간 투자보조금 지원 실적, 기업의 투자여건 분석·평가를 위한 기관 간 소통, 투자기업의 만족도 등을 평가했다.

평가를 통해 전국(서울, 인천, 경기 제외)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개 단체를 '지방투자촉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해 인센티브로 60~75%의 국비 보조율을 5% 추가해 지원해 왔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투자기업의 재정능력과 고용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결과, 올해에 11개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중앙심의를 전부 득해 국비 184억원(산업부 집행예산의 16%정도)을 기업에 지원했으며, 12월 추가 심의를 위해 3개 기업 국비 36억원을 지원 신청한 상태이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 및 신·중설 기업 등이 지원 대상으로, 특히 신·중설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투자에 해당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전북은 기업유치 당시부터 실제로는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해, 관할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에, 기업의 투자시기도 앞당기고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북이 '지방투자촉진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올해 국비 약 15억원 정도를 더 지원받았으며,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국비를 더 지원받아 지방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전해성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우수 자치단체 수상으로 정부로부터 전북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지자체라는 공인을 받은 셈"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뿐 아니라 유치기업의 지원 및 사후관리에도 집중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 '사모님' 기록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조특위서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 '사모님'이라는 명칭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 '사모님'이라는 명칭이 기재돼 있다며 청와대 내부 의약품이 외부인사에게 지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에서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2015년 6월24일자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시 관철염 치료제로 알려진 '세레브렉스' 14일분을 처방 받았다. 해당 불출대장에는 '사모님'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에게 "청와대 의약품을 청와대 직원이 아닌 다른 외부인사에게 처방하거나 허용할 수 있느냐"며

"직원을 사모님이라 할 리는 없고, 대통령을 사모님이라 부른다. 사모님은 누구냐"고 따졌다.

이에 이 의무실장은 "해당 날짜를 제가 정확히 확인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면서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진땀을 뺐다.

윤 의원은 또 "환정신청 의약품 구매량과 재고량 등 불출대장 내역이 맞지 않는다"며 "대체 (의약품들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느냐"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자나스, 할시온, 스티븐스, 폴리펴 등은 수면제라며 "특히 해의순방을 많이 가는 청와대 근무여성(그 때 사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의무기록은 작성은 되지만, 국가기밀사항이라 공개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사용자와 불출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